

# ‘지각출발’ 후반기 국회, 곳곳 충돌

### 행안위, 윤희근 인사청문회 ‘깜깜’...과방위, ‘반쪽회의’ 경찰국 설치 등 기싸움...국방위·법사위도 ‘지뢰밭’

53일간 ‘개점휴업’ 했던 국회가 어렵사리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국회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특히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 협의부터 삐걱거리는 등 여야간 기싸움이 본격화하며 일찌감치 ‘화약고’로 떠올랐다.

행안위와 과방위에서 쟁점이 된 경찰국 설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앞으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행안위의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잡지 못한 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이재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다음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

일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윤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은 다시 안갯속이 됐다.

민주당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류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 청문회를 ‘경찰국 정쟁화’에 이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류 총경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윤 후보자를 만나 총경회의에 대한 책임을 묻은 대기발령과 회의 참석자 간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정부·여당이 전국 총경 회의를 12·12 사태라고 규정해 한다”며 “류 총경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학계, 현직 국

가경찰위원회 위원장까지 야당 측 증인·참고인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다음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를 모두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의 ‘반쪽회의’로 치렀다.

민주당 소속인 정재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29일 회의에서 “오늘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저는 (회의) 파행이라고 보지 않는데 파행이라고 부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측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날짜를 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간사 협의로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하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첫 회의부터 여소야대의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방위 파행의 이면엔 첨예한 상

임위 현안을 앞두고 여야가 사전 협거루기에 나선 측면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성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상임위 의사 일정부터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KBS·MBC 등 공영언론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공개 직격하는 한편,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의 실수로 ‘공영언론 블랙리스트’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일 공영방송 패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 위원장 거취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임기가 법률로 보장돼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 봐 (여권이) 언론을 통해 간접 압박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도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로 꼽힌다.

각각 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입법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 어민 복속 사건 등 현안에 따라 상임위 내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

## 송갑석 “이재명 인식, 민주당 근간 훼손”

### “서민·중산층의 정당” 기치 흔들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31일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의 국민적 지지’ 발언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인식은 민주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 발언의 심각성은 다른 발언에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부자들 중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어야 하나’라는 인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기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이자 노선”이라며 “민주당이 걸은 길 자체이고 그 말 안에는 민주당의 정신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고 누구를 대변해야 하나”면서 “우리는 더욱 서민들의 삶에 집중해야 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근간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부자들의 이해 관계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때문에 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의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현실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언론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더 멀어져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 민주 당대표,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압축

박·강 단일화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는 박용진·이재명·강훈식 후보(이하 기호순)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 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도종환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3선 김민석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재선 강병원·박주민 의원, 5선 설훈 의원 등 5명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번 예비경선에는 선거인단 383명 가운데 344명(89.82%)이 참여했다. 당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의 본선 레이스는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앞세운 이 후보와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97그룹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해 대표를 뽑는다.

권리당원의 지지세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의원이 유력한 ‘1강’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박 후보와 강 후보의 단일화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이재명·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명이 후보로 나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광주 서갑 출신의 송갑석 의원

을 비롯해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재래·윤영찬 후보(기호순) 등 8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 경선은 6일 강원 및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한 달간 매주 주말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 여의도 클릭

### 김승남 ‘우주잔해물최소화법’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정부가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3천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8천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물체끼리 충돌해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6천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3천만개에 달하고 있다.

또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사업자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도 우주잔해물 경감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우주잔해물 경감 시책 수립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